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6월 15일(수) 16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6. 15.(수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담당과장	이민우 과장(044-203-4210) 김정예 과장(044-203-5540)	담 당 자	김효선 사무관(044-203-4212) 박은표 서기관(044-203-5568)

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총력 지원

- 산업부, 기업 프로젝트와 직결된 규제개선 집중 지원

- 규제개선, 신속 행정, 마중물 지원 등으로 53건 투자프로젝트 조기 실행 추진

1. 산업부의 산업규제 혁신 4대 추진방향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이창양)는 **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**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하여, **기업투자 촉진**을 위한 **「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」**을 추진할 계획임

①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**'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'**를 **집중 발굴**하여 산업부 소관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,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개선

② 과다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**'킬러 규제'**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**환경, 노동, 교육** 등 분야 규제를 **합리적으로 개선**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

③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**각종 평가·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**하여 일괄 정비

④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**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**를 발굴하여 **공공부문 역할 재조정**

□ 이에 따라, 우선 **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및 투자애로**를 **집중 발굴**하여 신속한 **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**할 계획임

2.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주요애로와 향후 추진방향

□ 새정부 출범 이후 **10대 그룹이 1,056조원**(국내투자 약 860조)**의 투자계획을 발표**하는 등 다수 기업이 **신규 투자** 또는 **기존 투자 확대**를 추진 중

○ 산업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**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**을 1차적으로 조사(5.24~6.2)하였으며, 이를 통해 규제,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**총 53건**(337조원)**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**하였음

* 10대 그룹 발표내용 중 구체적 계획 또는 애로가 없는 경우는 제외

○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①**규제 개선**(26건, 239조원), ②**신속 행정지원**(14건, 71조원), ③**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특전 확충**(25건, 288조원) 등이 필요하다며 **정부에 투자애로 해소를 요청**하였음

1 직접적인 **규제·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 : 26건, 239조원** 사업

〔**용적률, 산단 입주업종 제한** 등 **입지규제**로 인한 신·증설 투자의 지연〕

❶ ㄱ사는 **정보기술업종 시설투자**에 '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바, 예정부지 내 **생산능력 확충**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%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**용적률**을 **상향**해줄 것을 **건의**

❷ ㄴ사는 **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**을 계획 중이나, 산단 **입주가능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**되어 있어 **공장 입주가 불명확**한 상황

❸ ㄷ사는 **에너지 저장장치 개발**을 위해 **연구인력을 3배 이상** 증원할 계획이나, **용적률 규제**로 **연구소 증설이 곤란**

❹ ㄹ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**희소금속을 폐기물에서 재활용**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나, **산단 내 폐기물 재활용 부지 면적 비율 규제**로 **투자 보류** 중

☞ **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부지 용도변경, 산단 개발계획 변경,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지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, 산단 입주업종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**

〔**엄격한 지원기준**으로 **제도 활용에 애로** : 유턴·외투, 경제자유구역 등〕

❶ ㅁ사는 **해외 생산공장을 매각**하고 **국내에 투자할 계획**이나 유턴 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**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필요**하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 내 증설이 어려우며, **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**(사업장 건축연면적 증가 要)되어 유턴 지원제도 활용이 곤란

❷ ㅂ사는 경제자유구역에 **바이오 제조·연구 시설을 구축**할 계획이며, 신규 건물에 **계열사 등 입주를 희망**하나 **수의계약 체결시 특수관계인**(계열사 등)**에 토지·건축물 임대가 불가**하여 동반입주가 어려움

☞ **유턴법,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, 계열사·모회사의 동반 입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**

〔**규제의 일률적 적용**에 따른 **애로 : 폐기물 재활용, 대기유해물질** 등〕

❶ ㅅ사는 **폐기물을 희소자원으로 재활용**하는 사업을 계획 중으로, **폐기물관리법**에 의한 **유통·처리방법** 등 **규제 적용***과 **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, 순환자원**으로서 산업적 부가가치가 큰 폐기물은 **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**

*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만 운송 가능하며, 별도의 보관시설 설치 및 보관기간 제한 등이 요구

❷ ㅇ사는 **기계장비 연구개발센터**를 구축할 계획이나, 희망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**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,**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극소량 배출하는 경우 예외를 **인정해줄 것을 건의**

☞ **순환자원, 극소량 배출 등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**

〔**신산업 창출, 혁신기술 활용**을 위한 **제도적 뒷받침이 부족**〕

❶ ㅈ사는 **지능화 선박공정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계획**으로, 용접로봇 등 산업용 로봇 활용시 울타리 설치(1.8m)가 필요하나 로봇이 계속 이동해야하는 선박공정 특성상 울타리 설치가 어려움

❷ ㅊ사는 이동형 로봇 생산설비 구축을 계획 중이나, 도로교통법에 따라 **자율주행로봇의 보도주행이 금지**되어 있으며,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서도 **현장요원**(운전면허증 소지)이 **요구**되어 **과도한 비용 유발**

☞ 협동로봇, 이동형로봇 등에 대한 **안전기준을 마련**하여 **혁신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**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**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**에서도 **원격 모니터링이 가능**토록 **기준 완화를 추진**

2 **신속·유연한 행정지원**이 필요한 투자 : **14건, 71조원** 사업

* 최적 투자부지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우대, 국유지 이용허가 등 요청

❶ K사는 **기계장비 연구개발 투자**를 위해 **관련 산업이 집적**되어 있는 지역에 **연구개발센터 입주를 희망**하고 있으며, 부지 공모시 반도체 기업의 **우선 입주 지원**을 요청

❷ L사는 **수송기계 공장 구축**할 계획이며, 기업보유 토지와 맞닿은 소유필지가 국유지로 묶여 있어 충분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움

❸ M사는 **에너지저장장치 생산시설 증설**을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설립예정지가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**교육환경평가를 진행** 중

☞ **첨단전략산업의 우선입주 허용 및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**

3 **마중물 지원과 특전 확충**이 필요한 투자 : **25건, 288조원** 사업

*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,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

❶ N사는 **정보기술 제조시설 구축을 준비** 중으로, **폐수, 용수,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**에 대한 **정부 지원을 요청**

❷ O사는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를 계획 중으로 **서비스로봇의 초기 시장창출**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

☞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**('22.8)과 함께 **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**이 **신설**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, 소상공인 대상 로봇바우처 운영 등을 통해 **서비스로봇 초기시장 창출 지원**

□ 산업부는 **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사업**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, **타부처 소관 규제**는 **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**하여 해소해나갈 계획

○ **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**는 **1차관(장영진)**이 **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**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나갈 것임

○ 또한, 금번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**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***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, **애로 해소, 특전 지원** 등을 통해 **조기 투자를 유도**해나갈 계획임

* (S사, L사)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, (L사) 가전공장 증축 등

□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"규제, 제도미비, 인허가 지연 등으로 **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** 사업 담당관이 **밀착 관리**하고, **추가 투자사업도 지속 발굴**해나갈 것"이라고 언급함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(투자프로젝트) 김효선 사무관(☎044-203-4212), (규제 개선방향) 박은표 서기관 (☎ 044-203-55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